



[뉴스] 국내최대 게임박람회 '지스타' 개막 하반기 시장 패권 가린다 02



Life

[AI 뉴스] 김진형 중앙대 교수 "개인정보 규제 발목 어릴때부터 코딩교육" L4



★ 하나에 떠는 '플랫폼 노동자'... 평가방식 개선 시급

(별점 평가)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음식 배달원의 절반가량은 주당 노동시간이 53시간 이상이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은 36.5%나 된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객 평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 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361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쌍방향 평점제 도입 ▲부당 평가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실시 ▲별점 평가 항목 세분화 등

의 대안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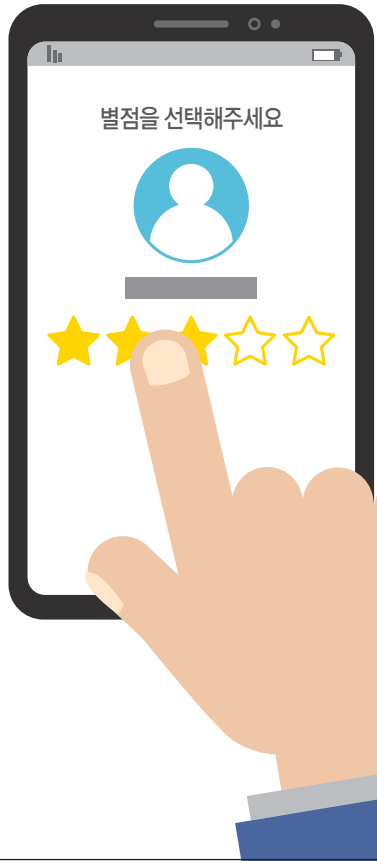
시민 최모 씨는 "에어비앤비 등 일부 플랫폼은 호스트도 숙박객의 이용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숙박객도 호스트의 태도와 장소를 평가하는 쌍방향 평점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호스트를 가려낼 수 있지만 악성 숙박객 또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플랫폼 노동자 또한 플랫폼에서 일을 주는 사업주와 이용 고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하게 고객의 평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향의 평가를 종합해 활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부당한 평점의 영향력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방향 평점제는 전체 360여개 의견 중 20명의 공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서모 씨는 "모든 제도에는 양과 음이 있기 마련"이라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측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터링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13명의 공감을 얻었다.

플랫폼 노동자 배려 문화 캠페인 확

서울시민, 고객 평점제 보완해야 쌍방 평점제 도입 등 대안 내놔 근로환경·보험 등 근본적 문제도



산은 공감 3위(9명)를 기록했다. 나모 씨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운동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며 "기업들이 고객 평점을 바탕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가혹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기업도 가혹한 별점 테러건은 평점 통계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 평점제 보완이 아닌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문모 씨는 "일방향이든 쌍방향이든 평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근로형태의 불안정함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1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성 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 비율은 34.4%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7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

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에서 "노동자를 ICT 플랫폼에 불러들여오로지 콜별·건별로 노동력을 추출하는 방식은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위험의 개인화"라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성을 지워내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영선 연구원은 "배달 앱 소속"이라는 문구에서 보듯 자본은 신기술을 활용해 고용계약 관계를 사업계약 관계로 바꿔내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책임 회피, 비용 삭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제별 역할과 대책은?'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연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대각선 횡단보도로 '걷기 편한 서울' 만든다 "미세먼지 잡아라" 서울시, 특별단속반 운영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서울시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2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240개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120개에서 2배로 늘리는 셈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바로 건널 수 있다. 별도의 보행 전용 신호로 보행자는 한 번에 바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며, 모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 시내 교차로 5700곳을 전수 조사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지역 516곳을 파악했다. 내년부터 연간 30개 이상씩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는 지선이 나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 위주로 설치



연세대 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서울시

됐으나 앞으로는 간선도로 등 넓은 도로에도 생긴다. 내년 설치할 연세대 정문 앞, 종로구청입구사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행 신호를 가변적으로 운영해 차량 정체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 수

요, 출퇴근 수요 등으로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보행량 차이가 큰 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한양도성 내부 지역인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먼저 시간제·요일제 신호체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시행되면 이는 국내 최초다. /김현정 기자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서울시는 12월부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

로 편성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고지, 물류센터와 같은 차량밀집지역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적발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와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서울시 고시원 운영자와 업무협약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57곳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고시원 운영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가 확보한 추경 예산 1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받는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 완료 후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고시원 65곳을 선정하고 15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고시원은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

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어진 지 오래된 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44곳의 노후고시원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지원 액수는 62억원에 달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민원 요청 등 행정 혼선 해소될 것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이원화됐던 경기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의 지정권과 관리권이 수원시장으로 일원화됐다.

수원시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절차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경기도와 수원시에 민원이나 요청을 나

뉘서 해야 했던 기업들의 불편과 산업단지 관련 사업 추진 시 벌어지던 행정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블록별로 지정권·관리권이 달라 벌어지는 혼선과 기업불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산업단지 통합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마침내 지난 7월 19일 수원시에 수원델타플렉스 지정권·관리권 통합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수원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요청안을 의결했다. /수원=김승열 기자 kimsy@